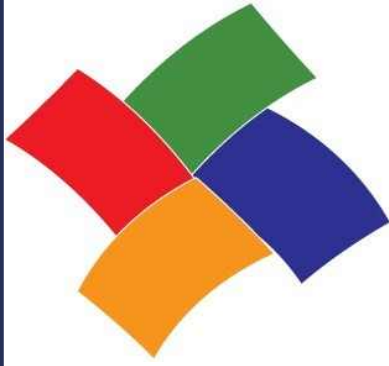


4대강, 부자감세 중단하고 지역과 일자리 복지에 돈을 써라!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대장정 당원 교양자료집

평등 · 생태 · 평화 · 연대
진보신당 연대회의 정책위원회



[총론]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대장정 당원교양 자료집

4대강, 부자감세 중단하고 지역과 일자리 복지에 돈을 써라!

1 이명박 정부, 총 90조 1,533억 원의 규모의 감세를 단행하다

“총 90조원의 세금감면액 중 80% 이상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감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금은 주로 부유층이 부담하는 세금이어서 세금 감면에 의한 혜택의 대부분이 부유층에게 돌아갑니다.”

○ 국회 예산정책처의 가장 최근 분석인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2009년 8월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대통령의 임기동안만 해도 모두 90조원을 상회합니다.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 규모〉

단위: 억 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소득세	27,440	42,031	68,121	74,431	71,448	283,470
법인세	0	38,514	103,288	100,978	101,592	344,372
종부세	4,935	20,680	25,770	25,770	25,770	102,925
기 타	22,747	23,211	34,972	34,972	45,535	170,766
합 계	55,122	124,436	232,151	232,151	244,345	901,533

○ 총 90조원의 세금감면액 중 80% 이상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감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금은 주로 부유층이 부담하는 세금이어서 세금 감면에

의한 혜택의 대부분이 부유층에게 돌아갑니다. 즉, 소득세 2% 인하에 따른 효과는 주로 월 소득 1천만 원 이상인 상위 2%가 누리게 되며, 법인세 감면액의 대부분은 전체 기업의 0.2%에 불과한 약 300개 정도의 재벌·대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2. 기획재정부, 4년 전엔 “감세정책 효과 없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도 2005년 말 「감세논쟁의 주요논점 정리」에서 … 감세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적자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도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감세에 따른 소득계층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감세로 인해 저소득층의 사회후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사회후생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 이에 따라 현^現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도 2005년 말 「감세논쟁의 주요논점 정리」에서 국내외 연구 결과와 사례를 바탕으로 감세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적자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마치 감세만이 살 길인 것처럼 180°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감세논쟁의 주요논점 정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2005. 11)

- _ 감세할 경우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의 감세 혜택이 많아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적자와 물가상승만 야기할 가능성이 큼.
- _ 일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_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큼.
- _ 1조원 감세는 GDP 2천 3백억 원 증가, 1조원 지출확대는 4천억 원 증가.

3. 여권이 봐도 감세정책은 투자활성화를 낳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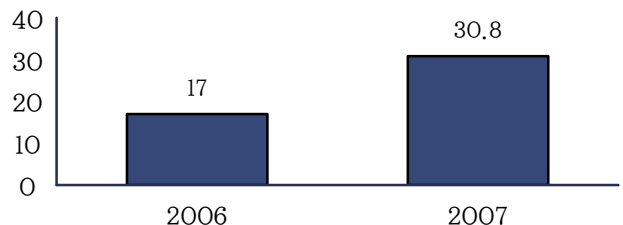
“이번에 경제를 살리라는 이유로 욕을 들어가면서 특별사면도 해 줬는데, 투자는 뒷전이고 다른 기업 먹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에만 급급한 기업인들이 꽤 있다.”
(차명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 감세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류층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감세는 그들의 소비지출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 그들의 소비지출 증가는 사회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양주잔을 쌓아놓고 가장 위에 있는 술잔에 위스키를 들이부으면 결국에는 바닥까지 술이 다 차게 된다는 이른바 위스키론). 따라서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과세규모를 축소하면 궁극적으로 내수가 증대될 것이다. ②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과세의 세율을 낮추면 그들의 신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그들의 신규투자는 새로운 세원^{稅源}을 창출하고 고용을 증대시킨다. 결국 세율의 감소로 인한 세수의 감세문제는 새로운 세원의 확보로 해결되며, 아울러 고용의 증대는 다시 저축과 소비의 증대로 연결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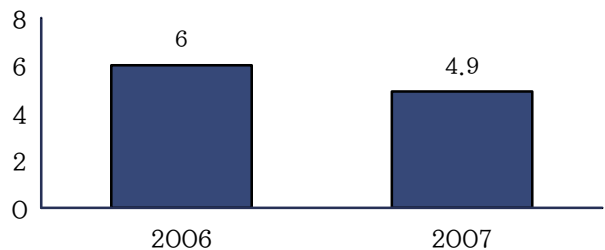
○ 그러나 나름 말끔하게 정리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논변은 현실에 의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4년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부유층의 충분한 소비가 결국에는 기층 서민들의 소득 증대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앞서 부유층들이 감세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을 소비해버릴 것이라는 증거조차도 부족합니다. 앞서 언급한 『감세논쟁의 주요논점 정리』에 따르면 감세 혜택이 많은 부유층은 소비성향이 낮다고 합니다.

○ 감세로 인한 투자 활성화라는 논리의 경우에는 현실과 더욱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는 단순히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그간의 감세와 규제완화, 심지어는 작년에 있었던 대규모의 경제인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스스로가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들의 금융자산변동



제조업체들의 생산설비자산변동



_ 우선, 2008년 5월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2007년 기업경영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제조

업체들이 보유 중이던 현금은 94조원에 달하였으며 최근 기업들의 현금 사정은 근 40년 이래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전체의 자산 가운데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1973년 이래 최고 수준이라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업들은 주로 돈 장사에 치중하느라 투자가 반대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 물론 '당시는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정부 때였으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크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_ 2008년 8월 21일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는 한나라포럼 초청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기업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안 돼서 투자를 안고 있다고 하는데 재벌들은 몇 십조 원씩 쌓아 놓고도 투자를 안 한다. ... 8·15 사면에서 경제인이 많이 사면 된 것은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는 뜻이 아니냐? ... 말로만 하지 말로 행동으로 보여 달라."

_ 이 무렵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대변인을 맡았던 차명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경제를 살리라는 이유로 욕을 들어가면서 특별사면도 해 줬는데, 투자는 뒷전이고 다른 기업 먹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에만 급급한 기업인들이 꽤 있다."

○ 이와 같은 사정은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00조가 넘는 투자 가능 자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즉시 금고 문을 열어주기길 바랍니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2009년 2월 19일의 신년회견) 그리고 이에 대해 이한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사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

버렸는데, ...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느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이한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9년 2월 20일의 '열린 세상 오늘' 인터뷰).

○ 이러한 상황은 2009년 상반기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부자감세와 각종 규제완화라는 방법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지만, 기업은 오히려 보유 현금의 규모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따르면
 - _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2009년 상반기 투자액은 13조8천17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천856억 원(9.1%)이 줄어들었습니다.
 - _ 토지나 기계, 그리고 건물 등 유형자산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 무형자산 취득 액수는 11조9천587억 원에서 11조3천178억 원으로 6천408억 원(5.4%)이 감소했습니다.
 - _ 자회사 출자나 신규 지분 취득을 나타내는 투자자산 취득은 3조2천449억 원에서 2조5천1억 원으로 7천448억 원(23%)이 급감했습니다.

4.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높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 우리나라 제일의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조원이 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불과 순이익의 6.5%만을 세금으로 내고 있어 가장 크고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가장 적게 세금을 내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우리나라의 세금부담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국가	법인세율 (2009기준)	소득세율 (2007기준)
호주	30	45
오스트리아	25	50
벨기에	33.99	50
캐나다	31.32	29
체코	20	32
덴마크	25	26.48
핀란드	26	32
프랑스	34.43	40
독일	30.175	45
그리스	25	40
헝가리	20	36
아이슬란드	15	22.75
아일랜드	12.5	41
이탈리아	27.5	43
영국	28	40
일본	39.54	40
한국	24.2	35
룩셈부르크	28.59	38
멕시코	28	28
네덜란드	25.5	52
뉴질랜드	30	39
노르웨이	28	24.6
폴란드	19	40
포르투갈	26.5	42
슬로바키아	19	19
스페인	30	27.13
스웨덴	26.3	25
스위스	21.174438	11.5
터키	20	35
미국	39.095	35

- 경제협력개발기구 내에서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는 구^舊동구권 국가들과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와 같이 해외자본 유치에 사활을 거는 나라들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세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낮은 나라는 모두 10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 뿐만 아니라 선진국 가운데서도 시장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경제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재 40%에서 50%로, 35%에서 40%로 인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부유층에 대한 세율인하를 단행하고 있어 국제적인 추세와도 배치되는 형국에 처하여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한국에서는 몇몇 재벌대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중소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도 낮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삼성, 현대, LG 등 국내 몇몇 재벌들에게 적용되었던 법인세율은 16.5%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법정최고세율(27.5%)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24만 여개의 흑자기업 전체의 유효세율인 19.4%(2007년 기준)보다도 한참이나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재벌들이 낮은 유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각종 세금감면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7개의 재벌기업만을 대상으로 보자면, 그들이 차지하는 순이익과 법인세비용은 전체 기업의 15.3%와 13.0%이지만 세금감면에 있어서는 기업전체의 3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일의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조원이 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불과 순이익의 6.5%만을 세금으로 내고 있어 가장 크고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가장 적게 세금을 내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유효세율과 세액감면(단위: 억)〉

기업명	순이익(a)	법인세비용(b)	유효세율(b/a)	세액공제감면
삼성전자	59,082	3,823	6.5%	10,382
포스코	58,295	13,826	23.7%	1,824
LG전자	5,150	322	6.3%	661
현대자동차	17,950	3,471	19.3%	1,316
현대중공업	29,496	6,930	23.5%	456
SK텔레콤	15,061	2,284	15.2%	964
LG디스플레이	12,935	2,066	16.0%	2,353
합계	197,969(15.3%)	32,722(13.0%)	16.5%	17,956(32.1%)
24만개 흑자기업	1,293,729	250,866	19.4%	55,885

5. 이 와중에 4대강 사업을 추진 그러나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생각해도 너무나 사업!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실제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예산 편중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당내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총예산(단위: 조)〉

구분	총사업비		
	본 사업	직접연계사업	합계
합계	16.9	5.3	22.2
국토부	13.6	1.7	15.3
농식품부	2.8	0.2	3.0
환경부	0.5	3.4	3.9

- 이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를 거쳐,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4대강 사업의 본질 즉 그것이 대운하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아울러 해당 사업에 들어가는 천문화적인 예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지만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복지를 포함한 여타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는 오해’라지만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세력들’의 준동도, 사업 자체에 대한 오해도 아닙니다.
-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실제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예산 편중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당내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즉, 4대강 사업은 국민의 대표인 나이가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인 국회의원들조차 억박질러서 입을 틀어막으려는 민망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부당하고 무리한 사업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출신의 이한구 의원의 4대강 사업 비판〉

“지금 재정이 엉망이고 전부 국가 부채로 하는 일인데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 데 투입해도 모자라는 판에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 (2009년 6월 11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의 입막음 시도〉

“여당과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2009년 8월 11일 청와대 국무회의)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입막음 시도〉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 ... 성공여부가 정권재창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 사업재검토나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09년 8월 11일 한나라당 내 원내대책회의)

○ 이 때문인지 4대강 사업은 한나라당의 든든한 원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선일보조차 의문시하거나 우려하는 사안입니다.

“과연 지금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을 만큼 4대강 살리기가 절박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더욱이 문제는 작년 말 14조 원이던 사업비가 6개월 만에 22조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영향을 보기 때문에 보통 1년은 한다. 4개월 영향평가로 충분한 환경대책이 마련될지도 걱정이다. ... 불과 몇 달 사이 사업계획의 큰 틀이 이리저리 바뀌고 사업비가 수조 원씩 들쭉날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쩐지 아슬아슬하다.” (“14조 원서 22조 원 된 4대강”, 『조선일보』 2009년 6월 8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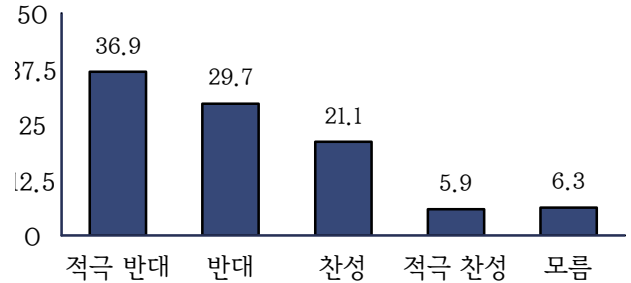
6. 국민들의 여론? 삽질 그만! 고용 안정! 그리고 복지확충!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66.6%가 반대하며 ... 응답자의 54.7%가 ‘무늬만 다를 뿐 결국 대운하 사업이다’는 의견이었고, ... ‘대운하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가 34.9%였으며, ... 만약 4대강 살리기 22조원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가장 적합한 용도를 묻는 문항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대책’ 31.4%, ‘대학 등록금 경감 등 교육대책’ 13.2%, ‘성장동력 확충대책’ 11.1%, ‘기타 SOC 개발사업’ 6.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66.6%가 반대하며, 단지 27.1%만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 엠브레인이 지난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전국의 20대 이상의 남녀 29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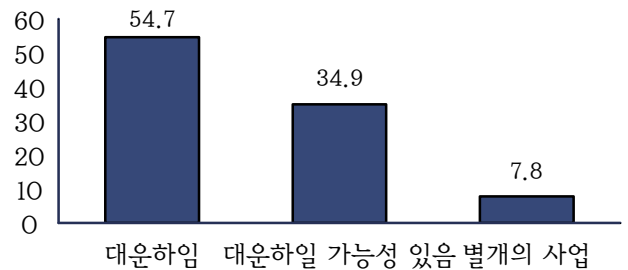
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4대강 사업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반대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4대강사업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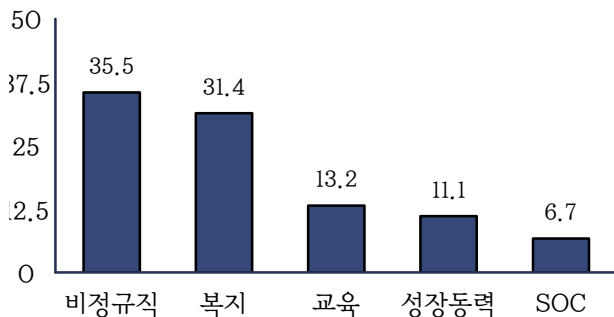
○ 뿐만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4.7%가 ‘무늬만 다를 뿐 결국 대운하 사업이다’는 의견이었고, ‘별개의 사업이지만 대운하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가 34.9%였으며,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다’는 의견은 7.8%에 불과해 절대 다수(89.6%)의 국민들이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하거나 적어도 개연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4대강사업과 대운하의 관계



○ 만약 4대강 살리기 예산 22조원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가장 적합한 용도를 묻는 문항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대책’ 31.4%, ‘대학 등록금 경감 등 교육대책’ 13.2%, ‘성장동력 확충대책’ 11.1%, ‘기타 SOC 개발사업’ 6.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사업예산의 적합한 용도



○ 요컨대,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을 서민들의 생활 안정화 대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여론과 기대에 반하여 대운하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여타 예산의 삭감이 없다는 청와대의 거짓말: 지방교부금, 서민의 기초생활보장비용, 심지어는 대학생장학금까지 삭감

대학생장학금 3,686억 원 감액
 기초생활보장 2,589억 원 감액
 지방교부금 4조 1,174억 원 감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502억 원 감액

○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복지를 포함한 여타의 예산 삭감이 없을 것이라며 현재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총사업비 22조 3천억 원 가운데 91.4%에 해당하는 20조 6천억 원을 사용해야 하는 국토해양부의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대폭 삭감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0년 도로, 철도, 그리고 주택관련

예산 경우 2009년도에 비하여 각각 29.6%, 25.57%, 그리고 40%씩이나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분	2008	2009	2010	증감	증감률
도로예산	7조 7,453	9조 1,275	6조 4,262	-2조 7,012	-29.6%
철도예산	4조 3,953	6조 1,382	4조 5,688	-1조 5,693	-25.57%
주택예산	681	3,477	2,080	-1,396	-40%

국토해양부 예산비교 (단위는 억 원)

○ 복지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올해보다 157억 원 삭감되었다. … 이 때문에 수혜 대상 서민이 7000명이 준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아 달라.” 이것 역시 정부와 여당에 ‘무조건 반대한 하는’ 세력들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바로 지난 8월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재벌 의원인 정몽준 최고위원조차 복지예산이니 만큼 정책위의장이 잘 참고하라는 요구를 할 정도였습니다.

○ 또한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아도 2010년도의 민생·복지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한마디로 ‘4대강 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의 살림살이 사정이나,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비정상적인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 첫째, 해당 예산안에는 “재정건전성” 회복과 유지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 무리한 추경과 부자감세 정책으로 재정 수지 적자가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국고가 바닥난 상황임에도 적자재정 기초

를 지속할 것임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예산' 마련을 위해 중산 서민을 위한 교육·복지·중소기업·농어민·지역현안사업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합니다. 가령, 4대강예산은 본예산 대비 975%, 추경대비 682% 증가하였으나, 중산층서민을 지원하는 민생예산의 경우에는 지난 추경대비 총 15.6조원(△8.6%) 삭감되었고, 본예산 대비로도 2.4조원(△1.4%) 삭감되었습니다.

〈민생예산과 4대강 예산 내역〉

단위: 조원

	'09 본예산	'09 추경	'10 예산안	본예산 대비 증감(%)	추경 대비 증감(%)
예산총액	284.5	301.8	298.5	14.0 (4.9%)	-3.3 (1.1%)
민생예산	169.2	182.4	166.8	-2.4 (-1.4%)	-15.6 (-8.6%)
4대강	0.8	1.1	8.6	7.8 (975%)	7.5 (682%)

민생분야 예산은 중소기업·산업에너지, 환경, 교육, 농수산식품, 보건복지노동, SOC중 도로·철도 분야 예산의 합으로 추정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예산〉

— 4대강 사업 때문에 삭감된 주요 민생예산 —

반 ^反 서민 예산	증감(율)	'09추경→'10예산
대학생장학금 삭감	-3,686억 -33.6%	1조 975억 → 7,289억
기초생활보장 감액	-2,589억 -3.2%	7조9,731원 → 7조7,142억
중소기업청 예산 삭감	-3.5조 -71.4%	4.9조 → 1.4조
지방교부금 삭감	-4조1,174억 -14.5%	30조5,985억 → 26조4,811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2조2,502억 -6.9%	32조6,511억 → 30조4,008억
화하비료가격지원 전액 삭감	-1,508억 -100%	1,508억 → 0

○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정부 스스로가 발표한 자료에서 명백하게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울러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 적극 찬동하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마저도 깎아주려 했던 한나라당의 중진들조차 복지예산의 삭감을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여타의 예산 삭감이란 없는 일이며, 단지 국민의 오해일 뿐이라고 강변합니다. 아니, 스스로 여당 국회의원들의 입까지 막으려 합니다.

○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우리의 터에 대한 무차별 삼질 계획을 그만 두고,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정략적 판단에 따르지 않은 순수한 사업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권 재창출용이라는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의해 이미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4대강 사업이 여타 재정에 미치는 폐해는 바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 측의 자료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통하여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다수가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대다수는 그 사업비용을 고용안정과 복지확충에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예산은 당연히 사회적 안정망 형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8. 2010년 예산에 대한 진보신당의 안

[지방재정 확충]

· 6조원은 지방재정 원상복귀

[일자리]

· 3조원은 매년 비정규직 50만명 정규직 전환 지원

· 4조원은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50만 명에게 월 70만원 지원

[보육, 교육]

- 4조원은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
- 4조원은 국공립 보육시설 2년 내 40%로 확대

[노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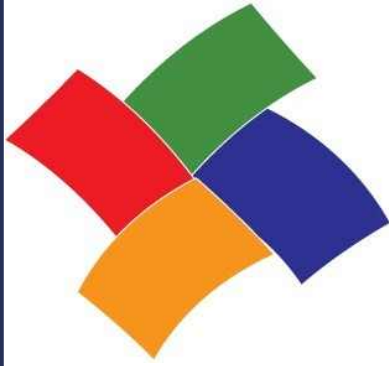
- 7조원은 모든 어르신께 매월 15만원씩 연금 지급
- 1조원은 193만명의 어르신에게 틀니 건강보험 적용

[의료]

- 1조원은 암환자 본인부담 0%,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 1조원은 전 국민 50% 백신 무상 지원, 500만 명에게 확진 검사비(13만2,500원) 전액 지원

〈2010년 정부의 감세/삭질예산과 진보신당의 예산 사용안 비교〉

정부는 이렇게 ...		진보신당은 이렇게	
부자감세	8조	지방재정 · 삭감된 지방재정 원상복귀!	6조4천
4대강 사업예산	23조	일자리확충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3조) ·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지원(4조2천억)	7조2천
		보육, 교육 · 반값등록금(4조) · 국공립보육시설(4조1천억)	8조1천
		노후생활 · 노후연금지급(6조9천억) · 틀니건강보험(1조)	7조7천
		의료 · 암환자본인부담완화, 초음파, MRI 건강보험 적용(1조2천억) · 신종플루백신무상지원, 확진비지원(1조)	2조2천
합계	32조	합계	약 32조



[지방재정편]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대장정 당원교양 자료집

삭감된 지방재정 6조원 원상복귀!

1. 삭감된 지방재정 6조원 원상복귀!

○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조승수 의원실(2009년 9월 2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6조 8천억 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36%나 급증했고,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내년에도 지속되어 지방교부금이 올해에 비해 4조 1천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2천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부분의 시도에서 올해보다 1천억 원 이상 내년 지방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4,804억 원), 전남(4,474억 원), 강원(3,422억 원), 전북(3,183억 원)처럼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재원 목적으로 기초지자체당 100억원 가까이 지원되던 부동산교부세가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인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상당수 기초 지자체에서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교육분야 예산의 경우 올해 38.3조원보다 26조원 6.9%가 감소한 35.7조원입니다.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며, 더군다나 이처럼 큰 폭의 예산 감소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도별 지방교부금 감소 예상액(단위: 억)〉

시도	09년(a)	10년(b)	차이(b-a)
서울	6,668	2,916	-3,752
부산	11,666	8,818	-2,848
대구	10,083	7,367	-2,716
인천	4,625	3,617	-1,008
광주	6,586	5,228	-1,358
대전	4,644	3,566	-1,078
울산	2,803	2,326	-477
경기	19,583	16,920	-2,663
강원	30,410	27,008	-3,402
충북	20,634	18,441	-2,193
충남	25,326	22,643	-2,683
전북	31,806	28,638	-3,168
전남	42,679	38,229	-4,450
경북	47,137	42,357	-4,780
경남	32,500	29,013	-3,487
제주	8,835	7,724	-1,111
합계	305,985	264,811	-41,174

〈시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단위: 억)〉

구분	교육청별09 년 예산총액(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현황			감소률 (b/a)
		09년 예산	10년 요구액	감소액 (b)	
서울	63,158	38,855	36,198	2,657	4.2
부산	24,851	20,929	19,498	1,431	5.8
대구	19,062	16,358	15,240	1,118	5.9

인천	18,722	15,509	14,449	1,060	5.7
광주	12,478	10,840	10,099	741	5.9
대전	12,033	10,318	9,612	706	5.9
울산	9,264	7,869	7,331	538	5.8
경기	80,969	61,841	57,613	4,228	5.2
강원	16,316	15,313	14,266	1,047	6.4
충북	13,883	13,387	12,472	915	6.6
충남	21,021	19,199	17,886	1,313	6.2
전북	20,141	19,231	17,917	1,314	6.5
전남	22,638	22,333	20,806	1,527	6.7
경북	24,437	23,933	22,297	1,636	6.7
경남	27,011	25,500	23,757	1,743	6.5
제주	6,127	5,126	4,775	351	5.7
합계	392,120	326,541	304,226	22,325	5.7

○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지자체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라야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해 주겠다는 정도입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도입방안을 확정짓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은 정기국회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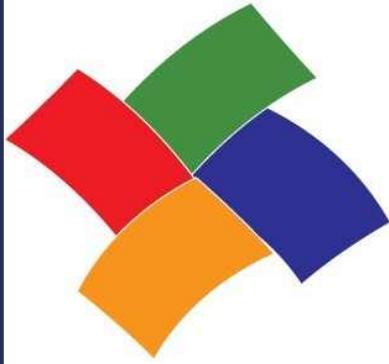
○ 현재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재정난은 정부의 부자감세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작년 말 단행된 부자감세로 인해 올해에만 12조 4천억 원의 세금감면이 발생하고, 내년에는 23조 2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교부금은 중앙정부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중앙정부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돈입니다. 결국 부자 감세로 인해,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원이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 부자감세가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지방채 급증과 민생예산 축소, 교육예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자 감세안의 유예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부자감세의 여러 문제점을 여당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감세 유예는 현재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를 유예할 것이 아니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이에 진보신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해, 4조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지원하고, 2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방교부금 원상복귀 예산〉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
지원 예산	4조 1,174억원	2조 2,325억원	6조 3,499억원



[일자리편]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대장정 당원교양 자료집

3조원으로 비정규직 50만 명 정규직 전환! 4조원으로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50만 명에게 월 70만원 지원!

1. 3조원이면 매년 비정규직 50만 명, 정규직으로 전환!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은 급격히 증가해, 2008년 8월 8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노동자 중 55% 수준입니다. 비정규직의 월임금은 125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250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한국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6년으로 영국 8.2년, 독일 10.5년, 스웨덴 11.5년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 비중도 38.7%에 불과해, 영국 19.3%, 독일 14.8%, 스웨덴 15.7%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OECD 국가 중 한국 노동시장 고용의 질 순위는 최하위를 맴돌고 있어, 노동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질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29개국 중 한국 노동시장 고용의 질 순위〉

고용지	고용기회	고용안정성	능력개발	소득보장	근로조건	고용평등	일가정양립	참여발전	사회보장
순위	25	29	25	15	29	29	15	28	27

※ 자료: 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07.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과도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비정규직 문제, 소득 양극화, 사회통합 해체를 가져 와 신빈곤

(MB 빈곤)의 등장, 자살률 증가, 각종 범죄율 증가, 가족 해체 등의 사회 문제를 가져온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더 많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노동시장에 관한 기초 통계 자료조차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실용이 아니라 ‘시장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에 불과합니다.

○ 올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7월 이후부터 비정규직법 때문에 100만 명이 해고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시행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해고될 것을 바라는 듯 공공 부문 비정규직 해고 통계를 매일 발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년간(‘09.7월~10.6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38만2천명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은 19,760명으로, 이 중 36.8%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계약종료가 37.0%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로 분류된 26.1%는 근로계약을 재작성하지 않고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법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

라 할 수 있습니다. 즉, 63%(정규직 전환 36.8% + 기타 26.1%)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의 '100만 해고대란설'은 허구임이 밝혀졌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더라면 정규직 전환 비율은 63%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입니다.

- 진보신당은 매년 3조원을 투입해, 5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향후 4년 동안 12조원을 지원하면 비정규직 200만 명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산〉

	내용	규모 및 예산	내역
지원 대상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을 적용받을 비정규직	49.2만명	41만명*12개월
지원 금액 (1년)	1인당 월 500,000원	2조9,520억원	50만원 × 49.2만명 × 12개월
지원 금액 (4년)	상동	11조 8,080억원	50만원 × 49.2만명 × 12개월 × 4년
지원 시기	2010년~2013년	4년	

※ 올해 7월부터 1년 사이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을 적용받을 사람은 매달 최대 41만명으로 추정됨(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2009). 이에 따라 매달 최대 41만명 기준으로 12개월 산정시, 1년에 49.2만명 지원 필요.

2. 4조원은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50만 명에게 월 70만원 지원

-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7%보다 2배 이상 웃도는 8.5%로 나타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는 실망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에 달합니다. 내년 상반기 대졸자가 쏟아지면, 청년 실업대란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대 사망원인 1위가 무려 6년째 '고의적 자해(자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실업이 자살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0년도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줄줄이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도 세입세출예산요구명세서」를 보면,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예산이 50억 원 삭감됐으며, '청년층뉴스타트 프로젝트' 예산 77억 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예산이 1,020억 원 삭감되어 작게는 24.2%에서 많게는 76.6%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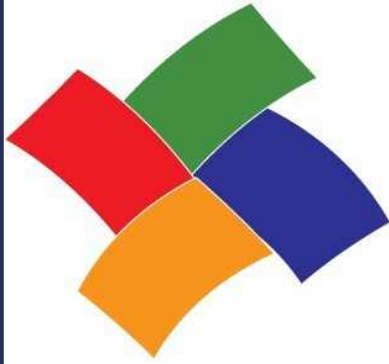
- 게다가 유일한 실업안전망인 현행 고용보험은 6개월 이상 가입자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근무한 적이 없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 실업자는 고용보험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영세자영업자 역시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라 장사가 안 돼 폐업할 경우,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실업수당을 도입해, 청년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 등 50만 명에게 최저임금의 80%에 달하는 70만원을 평균 1년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수당은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유럽 11개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수당 도입 예산〉

대상	규모	예산
청년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이 종료된 장기 실업자	50만명	4조2천억원
1인당 지원액수	지원조건	내역
1년간 월 70만원(최저임금의 80%) 지원	부부 합산 소득이 평균소득의 50% 이하	50만명×70만원×12개월



[교육·보육편]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대장정 당원교양 자료집

4조원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4조원으로 2년 내 국공립보육시설 40% 확보!

1. 4조원이면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 우리나라 정부가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을 보면 GDP 대비 0.6%로, OECD와 EU 평균 1.1%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민간이 부담하는 돈은 1.8%로, OECD 평균(0.4%)의 4.5배, EU 평균(0.2%)의 9배입니다. 즉, 우리나라 대학에 정부가 낸 돈은 적고, 학생과 학부모가 내는 돈은 많은 것입니다.
- 2008 OECD 교육지표에서 활용한 2005년 GDP가 810조 5천억 원이니, 정부는 약 4조 8천억 원을 부담하고 민간은 14조 5천억 원 정도를 낸 셈입니다. 민간부분에서 사학재단이 낸 전입금 1조원을 빼면, 학생과 학부모가 각출한 돈이 약 10조원입니다. 정부의 4조 8천억 원보다 2배 많습니다.
- 이렇다 보니, 한국의 대학 수업료는 너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수업료는 3883달러, 사립대학은 7406달러(미국달러의 구매력 지수로 환산 시)입니다. 국립대학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높고, 사립대학은 미국, 터키, 멕시코, 호주 다음으로 높습니다.
- OECD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이 대학 수업료가 무상입니다. 국공립 고등교육기관만 보면 체코, 폴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 추가되어

총 8개 나라가 무상입니다.

- 정부의 장학금·가계지원·학자금대출 지원도 OECD 평균의 1/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 정부 지원금을 현재의 4조 8천억 원보다 2배만 높여도 대학등록금 반값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올해 2009년 등록금은 총 12조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중 사립대학과 정부가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돈이 2조원을 넘습니다. 따라서 4조원만 추가하면 129만명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반값 예산〉

지원 대상	예산	내역
대학생 50%	4조원	2009년 등록금 12조원-(사립대학과 정부 장학금 2조원)-정부지원금 4조원 추가=6조원(반값 등록금 실현)

2. 4조원이면 국공립 보육시설 2년 내 40% 확보

-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하며,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은 12만 3천 명으로,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의 11.3%에 불과합니다.

○ 민간 중심의 보육은 가족의 보육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막거나 아동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간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낮은 서비스 질 등은 여러 차례 사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2005년 GDP 대비 0.2%로, OECD 평균 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OECD 2009년 통계자료). 보육은 아동 전체의 보편적 욕구로서, 아동 발달 주기에 맞는 형평성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성 친화적 일자리를 제공해 여성 고용을 확대시킬 수 있고 저출산 하락 역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욕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진보신당은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포함할 때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45%에 불과하므로, 확대되는 보육서비스는 100%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국공립보육

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수는 전체 아동 대비 4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예산〉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	내역
지원대상	0-2세 60%까지 확대 3-5세 85%까지 확대	현재 전체아동 대비 보육시설 이용 아동 38.4%에 불과
규모	947,481명	현재: 1,052,650명 / 추가: 947,481명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수	13,535개소	- 현재: 1,769개소 / 추가: 13,535개소 - 보육아동 대비 국공립 이용 수준 11.3%⇒38.9%까지 확대 - 1개소당 이용아동 70명 기준
일자리수	135,350명	- 1개소당 인력 10명 필요
임금	170만원(월)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예산	8조1,268억원	-임금: 135,350명×170만원×12개월=2조7,611억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13,535개소×330㎡×1,201,300원=5조3,657억원
1년간 예산	4조원	국공립시설 2년 동안 확대, 이후 전액 임금 지원으로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인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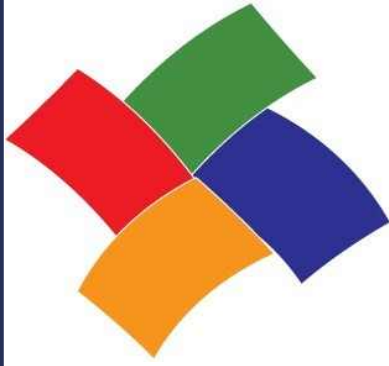
연령	전체아동수	현행보육시설이용아동수		국공립확대인원(명)	국공립시설필요수(개)	필요인력수(명)	공공부문 이용율(%)	
		전체	국공립				현행	확대시
0	446,738	58,128	1,709	209,915	2,999	29,988	2.9	47.4
1	445,796	129,629	10,025	137,849	1,969	19,693	7.7	33.2
2	438,576	239,142	23,097	24,004	343	3,429	9.7	10.7
3	448,625	242,187	28,705	139,144	1,988	19,880	11.9	37.4
4	475,449	203,204	28,779	200,928	2,870	28,700	14.2	48.3
5	489,413	180,360	26,703	235,641	3,366	33,660	14.8	53.6
총계	2,744,597	1,052,650	119,018	947,481	13,535	135,350	평균 10.9	평균 38.9

*2008년 전체 아동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6세 이상은 추계에서 제외.

*국공립시설 1개소당 평균 70명 보호, 종사자수는 개소당 평균 10명임

*0세~만2세의 경우 부모 및 양육자가 직접 보육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아동 대비 60% 포괄하고, 만3세~만5세의 경우 사회적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전체 아동 대비 85%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설계

*보육시설이용 현황은 2008년 6월 30일 복지부 자료 기준.



[노후생활편]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대장정 당원교양 자료집

7조원으로 모든 어르신께 매월 15만원씩 연금 지급

1조원으로 어르신 193만명에게 틀니건강보험 적용

1. 7조원은 모든 어르신께 매월 15만원씩 연금 지급

- 우리나라 노인 가구 중 45%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OECD 평균 13%의 3.5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 노인 빈곤이 심한 이유는 노인복지제도가 발전되지 못하고, 국민연금이 도입된지 20년에 불과해 아직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미비한 까닭이 큼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폭넓은 사각지대는 많은 어르신들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 노후생활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어, 올해부터는 노인인구 70%까지 월 2만원~8만9천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월 2만원~8만9천원은 한달 용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 한국의 노인공공복지 지출은 1.5%로 OECD 평균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노후생활에 대한 정부의 낮은 지원 때문에 자녀들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어르신들은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편해 노인인구 10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월 15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월 15만원 지급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27.7%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에게 큰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본생활권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 전액을 중앙정부 부담으로 바꿔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확대 예산〉

대상	지급액	추가 필요 예산	세부내역
노인인구 100%	매월 15만원	6조 8,772억원	{5,192,710명(2009년 노인인구)×15만원(월)×12개월} - 2조4,697억원(2009년 중앙정부 기초노령연금 예산)

2. 1조원은 어르신 193만명에게 틀니 건강보험 적용

○ '건강한 치아는 다섯 가지 복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치아가 빠져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 먹는 기쁨을 빼앗김과 동시에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어르신들이 틀니를 마련하려면 수백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틀니 가격도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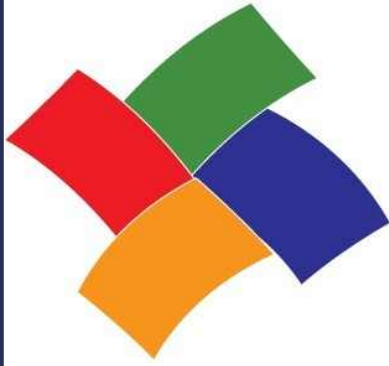
○ 2008년 정부에서도 노인의치를 건강보험 적용했을 시, 1조원의 예산이 든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사실 적용될지도 미지수입니다.

○ 틀니 지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되어야 합니다. 1조원만 있으면 193만명의 어르신에게 노인틀니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 예산〉

지원대상	내용	필요재정
어르신 193만 명	틀니 건강보험 적용	1조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2008. 10. 참조.



[의료편]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대장정 당원교양 자료집

2조원으로

- 암환자 본인부담 0%,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 전국민 50%에게 신종플루 백신 무상
- 500만명에게 확진검사비 전액 지원

1. 1조원은 암환자 본인부담 0,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 MBC 『불만제로』 2009년 2월 방송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산부인과 산전 초음파 가격이 병원마다 최저 1만 5,000원에서 최고 14만 5,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척추 질환에 대한 MRI 비용 역시 30만원~70만원으로 차이가 심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음파 및 MRI는 국민들에게 사실상의 필수 진료 항목이 된지 오래입니다.

○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암환자 본인부담은 10%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의료비 부담은 더욱 높아집니다. 암만이라도 건강보험 내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확대해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시 총 471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척추질환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 건강보험 확대 시 65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내 본인부담금을 10%에서 0%로 내렸을 시 67만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603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건강보험에 필요한 총 소요재정은 1조 1,800억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예산〉

건강보험 확대 항목	대상자수	필요재정	항목성격
초음파	471만명	6,600억원	신규
MRI(척추질환 등)	65만명	2,600억원	확대(현재 암·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보험급여→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확대)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67만명	2,600억원	확대(본인부담률 10%→0%)
합계	603만명	1조1,800억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2008. 10. 참조, 재수정.

2. 전국민 50%에게 신종플루 백신 접종, 500만명에게 확진검사비 전액 지원

○ 신종플루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의 늦장 대응이 국민 건강을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과 관련된 11개 사업 25억 원 가량의 예산을 삭감시켰

습니다. 전염병의 유입을 막는 국립검역소, 신종전염병 대책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방지를 위한 지역 공공의료 예산도 삭감시켰습니다. 초기 전염병 확산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의 예산 삭감은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 이제 와서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제에 대해 현재의 비축량 5%를 넘어 올 10월까지 인구의 11%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구의 20% 수준을 권고하고 있는 WHO 기준이나 30~50%를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 수준에는 현저히 못 미치는 것입니다. 신종플루 백신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천만 도즈의 백신을 확보해 11월 중순경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하나, 9월, 10월, 11월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종플루 확진검사시 소요되는 비용은 13만 2,500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확진검사로 판명나지 않는 이상, 환자 본인이 확진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초기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하던 것이 민간의료기관으로 치료가 확대되면서부터 확진검사부터 치료비까지 이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종플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입원할 경우 1인실, 혹은 특실을 사용해야 하는 전염병 특성 때문에 높은 입원비를 내야 합니다. 고가의 검사비 및 치료비 때문에 저소득층은 신종플루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아예 검사부터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국가가 나서서 국립백신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합니다. 돈벌이 의료만 추구하고 시급한 전염병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중보건정책은 외면하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당장 중단해

〈참고자료: 예산추계 근거자료〉

1. 신종플루 백신(정부 발표)

○ 백신 확보 상황

- 1차분: 1,000만 도즈(1회 접종시 1,000만명분 / 2회 접종시 500만명분)

▪ 올해 11월 중순까지 확보 예정

▪ 국내 독십자 700만 도즈+해외 다국적 회사(GSK) 300만 도즈

▪ 임상허가 결과에 따라 1회접종 또는 2회 접종이 결정되므로
접종대상은 허가후 최종 결정

- 2차분: 500만 도즈+α

▪ 내년 1~2월 국내 독십자사가 생산 가능한 추가분 500만 도즈에
대해서는 면역증강제를 사용해 물량 확대할 예정(2배~4배까지 증가)

- 정부는 11월 중순경에 접종을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의료인, 임산부, 학생 및 군인 등을 대상으로 유행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규모, 즉 전 인구의 27%인 1336만명에 대한 접종을 마치고록 할 계획.

○ 백신 가격

- 독십자 1차분 가격 협상 결과 백신 1도즈 구입비 8,000원이나,
2차분에서는 더 높아져 14,000원 이하에서 결정할 예정.

- 백신은 따라서 2차분을 고려했을 때, 백신가격이 아직 가격 협상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계산에서는 1만원으로 추정.

○ 당정협의시 논의사항(8월 31일)

- 정부는 의료·방역요원(100만명)과 초·중·고생(750만명), 군인(66만명) 등 910만명에게 신종플루 백신을 무상 접종할 예정

2. 신종플루 확진검사비(정부발표)

- 8월 18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인정

- 보험 적용 시 검사비의 30~50%(12,650원~79,530원)만 본인 부담

- 의심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비용(132,500원)을 본인이 부담

야 합니다. 또한 타미플루에 대한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중지하고 국민의 살 권리를 위해 복제약을 생산해야 합니다.

- 우선 당장은 전국민 50%에게 신종플루 백신을 무상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돈 때문에 검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진검사비 전액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후 치료비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은 개개인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병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 번 발생하면 전 국민이 광범위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신종플루 지원예산〉

대상	필요 예산	내역
전국민 50%	3,180억원	· 2,500만명-910만명(정부 무상공급 예정)=1,590만명 · 1,590만명×2회분×10,000원(백신비용)
저소득층 500만명	6,625억원	· 500만명×132,500원(확진검사비 전액)
합계	9,805억원	